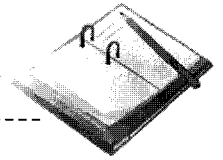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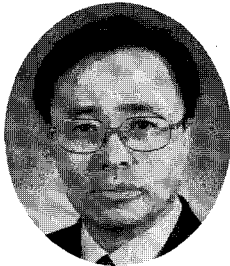


세계무역기구(WTO)와 한국의 식량안보



세계 쌀 재고감소 · 가격 폭등 반드시 생산기반 유지해야

WTO 150여 회원국 중 수출국 10여개 불과, 협상결과 무관 대부분
다원적기능 · 식량안보 중요성 홍보, 비전제시로 농민불안 해소해야



윤석원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체제가 출범한지도 벌써 10년이 지나고 있다. 현재 우리의 농산물은 관세화에 의해 모두 개방이 되어 있으나 그나마 현재 진행 중인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에서 이를 대폭 감축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10년간 관세화 유예를 받았던 쌀 시장 개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쌀 재협상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이제 현 단계에서 과연 WTO체제는 무엇이고, 우리의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할 시점이다.

WTO 체제는 시장지향의 자유무역을 통한 인류의 후생증대, 농산물시장의 개방과 자유화를 통한 식량문제, 그리고 기아와 빈곤문제의 해결 등을 추구하고 있으나 그것이 얼마나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야할 시점이다. 그것은 우리의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에 중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WTO체제는 무엇인가

WTO 체제의 출범으로 야기된 농산물 시장의 개방은 제3세계 국가들 및 대다수의 수입국들은 보조금의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농업은 해체적 위기 상황이며, 인류의 식량문제 해결은 아직도 요원하다. 60억 인구 중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구가 전체의 25%인 12억 명에 달하고 2달러 미만으로 연명하고 있는 인구는 28억명으로 약 50%에 달하고 있으나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

WTO에 가입하고 있는 150여 개의 국가 중에서 농산물을 수출하는 나라는 10여 개국에 불과하며 수입하는 나라도, 즉 수입이라도 하여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라는 20여 개국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수출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식량이 부족할 지라도 수입할 여력도 없기 때문에 WTO 협상이 어떻게 결정되던 영향을 받지 않는 나라들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미국, EU, 캐나다 등 선진 수출국들은 가격보조도 아직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소득 보전 직접지불(Direct Payment)을 시행하고 있다.

프린스턴 대학의 피터 싱어(Peter Singer) 교수는 'WTO 체제는 국내적으로도 빈부격차의 확대를 조장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나라경제 전체적으로 소위 경쟁력이 있는 특정산업은 발달할 가능성이 있게 되고 이는 이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소득은 증

가하는 반면, 열위의 산업은 축소되거나 사라지게 되어 이 부문 종사자의 소득은 하락하게 된다. 이는 산업간 소득격차를 유발하게 되고, 나아가 국민적 빈부격차를 초래하게 되며 사회구성원간의 갈등으로 표출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다.

'식량안보·식량주권'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세계식량농업기구(FAO)는 식량안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위해 언제든지 충분한 식량에 접근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바 있다. 또한 1996년 세계식량정상회의에서는 충분하고 적절한 식량에의 접근은 모든 인류의 권리를 강조했다. 한편 식량주권이란 '모든 나라가 자국의 식량 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말하며 GATT 21조와 WTO 농업협정 20조 c항에 명시되어 있으나 WTO체제는 이러한 식량주권과 관련된 조항을 사실상 사문화하고 있다. 이는 강대국의 횡포이며 오만에서 비롯된다.

우리의 식량안보·식량주권은 왜 위기인가

첫째, 국제곡물시장은 구조적으로 몇 가지 위기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는 파점적 구조이기 때문이다. 전체곡물의 경우 상위 5개국(미국, 중국, 인도, EU, 브라질)이 생산량과 소비량의 각각 63.8%, 64.9%를 차지하고 있고 수출량은 상위 5개국(미국, 호주, 아르헨티나, 캐나다, 브라질)이 71%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의 주식인 자포니카 쌀의 세계 총 무역





**쌀 자급률 목표의 설정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서는
중장기 자급률을 설정하되 최소한의 수입량을 허용해야 하고,
자급율의 급격한 하향조정은 지양해야 하며,
생산기반은 어떠한 형태로든 최대한 유지 하여
식량전체의 자급률을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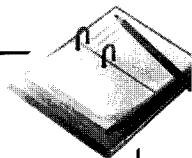
량은 생산량의 4.9%에 불과한 얇은 시장 (Thin market) 구조여서 수급에 약간만 차질이 와도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불안정한 시장구조이다.

둘째, 세계 쌀 재고 감소와 가격 폭등현상이다. 세계 전체 곡물 수급은 1999년 이후 4년 연속 생산량이 소비량을 밀돌면서 재고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바(USDA), 재고량이 1999년에 5억 6,594만 톤이던 것이 2003년에는 3억 942만 톤으로 줄어들어 재고율이 1999년 30.3%에서 2003년에는 16.0%로 줄어들었다. 쌀 재고율은 2000년 37.7%에서 2003년 20.2%로 감소하였으며, 최근 국제 쌀 가격은 중립종 기준으로 2001년 10월에 300\$/톤, 2003년 12월에 554\$/톤이던 것이 2004년 3월 현재는 568\$/톤로 급등하고 있다.

셋째, 최근 중국의 곡물생산량이 크게 감소

하여 세계 곡물수급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3년 곡물생산량(3억 1,500만 톤)은 1998년 대비 7천만 톤이 감소하였는데 쌀 생산량은 1998년에 1억 3,910만 톤이던 것이 2003에는 1억 1,500만 톤으로 2,410만 톤이 감소하였으며, 밀은 1998에 1억 973만 톤이던 것이 2003에는 8,600만 톤으로 2,373만 톤이 감소하였다. 옥수수는 1998에 1억 3,295만 톤이던 것이 2003에는 1억 1,400만 톤으로 1,895만 톤이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재고율은 1999에 79.9%, 2003에 28.5%로 약 51.1% 포인트나 감소하였다. 이는 앞으로 국제곡물가격의 폭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해 준 것이다.

넷째, 기후온난화와 지구환경의 불안정성으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엘니뇨, 오존층 파괴 등의 현상이 그것이다. 특히 엘니뇨는 1980년대 이후 5차례 정



도 발생한 것으로 관측되었으며 태평양 연안 국가에 심각한 식량수급 불안을 야기하고 있으며 엘니뇨는 가뭄, 홍수, 폭풍, 저온 등을 동반하여 농작물에 한해 또는 냉해 등의 형태로 농작물에 엄청난 피해를 매년 주고 있다.

다섯째, 세계 총 교역량의 80%정도를 소수의 다국적 곡물기업이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미국계의 카길, 아처다니엘스 미드랜드(ADM), 콘 아그라(Peavey), 콘티넨탈 그레인, 그리고 유럽계의 루이 드레퓌스(LDC), 분계, 앙드레(가낙) 등 세계 7대 곡물메이저의 세계 곡물시장 점유율은 곡물 교역량의 약 80%에 달하고 있으며, 유통분야 시장점유율도 총 저장 능력에서 75%, 수출 취급능력에서 56%, 밀 제분에서 69%등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곡물메이저들은 언제든지 수출금지, 가격담합 인상 등 불공정 무역을 자행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세계 곡물시장이 WTO 등 국제기구의 규범이나 질서 보다 이들 메이저들에 의해 혼란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식량안보·식량주권' 위한 대응, 무엇이여야 하는가

이러한 국제 농산물시장의 불안요인은 전쟁의 위협을 포함하여 생태학적 위험, 농작물과 가축의 질병, 방사능 오염, 농산물수급의 변화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식량안보는 이 같은 위협에 대한 보험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식량안보·식량주권을 위한 공공지출은 국민적 위험회피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위험회피를 위해 보험료를 지불하

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식량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범정부차원에서 홍보와 국민적 이해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쟁력 제고나 구조조정을 통하면 우리의 농업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크게 제고되는 것처럼 홍보해서는 안되며 유럽처럼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역할을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해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식량안보·식량주권을 위해 과감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식량안보 역량의 강화와 인식의 전환이다. 2001년의 쌀 과잉기조로의 전환은 한때나마 식량안보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여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식량안보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미래에도 변함없는 덕목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셋째, 식량자급목표와 생산기반유지 목표 설정을 통한 비전제시로 농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식량수급목표와 논 면적의 유지목표를 설정하지는 것은 국가와 민족의 존립을 위한 최소한의 주권이며 식량안보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해야한다는 당위에서 출발해야 한다. 쌀 자급률 목표의 설정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중장기 자급률을 설정하되 최소한의 수입량을 허용해야 하고, 자급율의 급격한 하향조정은 지양해야 하며, 생산기반은 어떠한 형태로든 최대한 유지하여 식량전체의 자급률을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것이 미래세대를 위해 지금 우리세대가 해야 할 가장 큰일이 아닐까 한다. **중앙정보**